

발제1.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장현선 | 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1.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 본 연구는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여건 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향후 부산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됨.
 - －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자문회의¹⁾ 2회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분류체계에 따른 인구구조 특징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여건을 파악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산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함.
 - －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와 대면면접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최소 1년 이상 부산에 거주한 15~79세 부산시민을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하게 표본을 추출함.
 - －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는 부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인종, 성 소수자, 여성, 청년 등 6개 분야의 활동가/연구자를 선정함.

부산 문화다양성 조사 설계

-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설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및 대면면접 조사 병행
- 자료수집 기간 : 2019년 3월 6일 ~ 3월 17일
- 설문조사 대상자 : 2019년 조사 진행시점 기준 15~79세 최소 1년 이상 부산 거주자
- 총 표본 수 : 1,200명
-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추출(Quota Sampling)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pm 2.8\%$

부산 문화다양성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소수집단	소수집단 접촉 경험	각 소수집단별 접촉 경험 정도
	소수집단 인식지표 - <수용도>	각 소수집단별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소수집단 인식지표 - <포용도>	각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정도 인식
	소수집단 활동지표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성별 불평등 관련 경험
사회 갈등 요소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각 사회갈등 현상 문항에 대한 인식정도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 <수용도>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수용도
	활동수준에 따른 연령대 수용도	동호회,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및 안부인사 가능한 연령대
	사회갈등현상 개선필요도	6개 사회갈등현상 개선필요도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문화다양성 관련 5개 문항 인식정도

1) 부산연구원 윤지영 박사, 보순복지개발원 이재정 책임연구위원, 부산대학교 석영미 박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부장,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문재원 교수,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송교성 실장 (총 6인)

2.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부산시민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상황이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5점 만점에 3.1점), 전국 평균(2.9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음.

– 부산시민의 34%만이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이었음. 문화체육관광부(2017)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동일 문항에 대해 26%만이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2.9점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부산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잘 실현된 결과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요 인식지표 중 하나인 소수집단 수용도(가족 및 동네 이웃) 측면에서는 전국 대비 성 소수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수용도가 모두 낮음.

– 문화다양성이 인정받고 있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소수집단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차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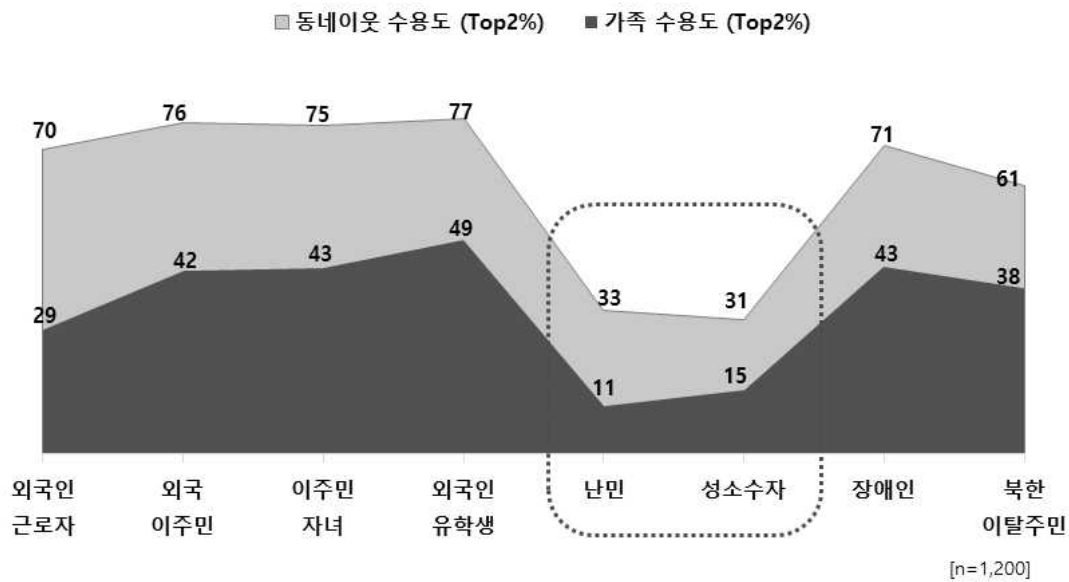
전국과 부산시의 조사 결과 비교 (5점 척도 평균)

문항		전국	부산	차이 (전국-부산)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2.9	3.1	-0.2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4	2.5	-0.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2.3	2.6	-0.3
우리나라는 다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6	3.1	-0.5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2.8	3.0	-0.2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인식	외국인 근로자	3.8	3.2	0.6
	결혼이주민	3.4	3.0	0.4
	성 소수자	4.0	3.5	0.5
	장애인	3.8	3.1	0.7
	북한이탈주민	3.8	3.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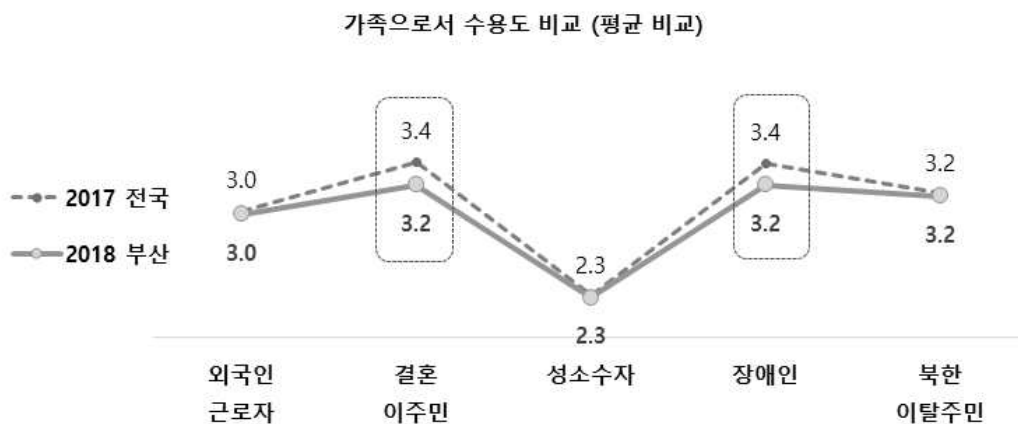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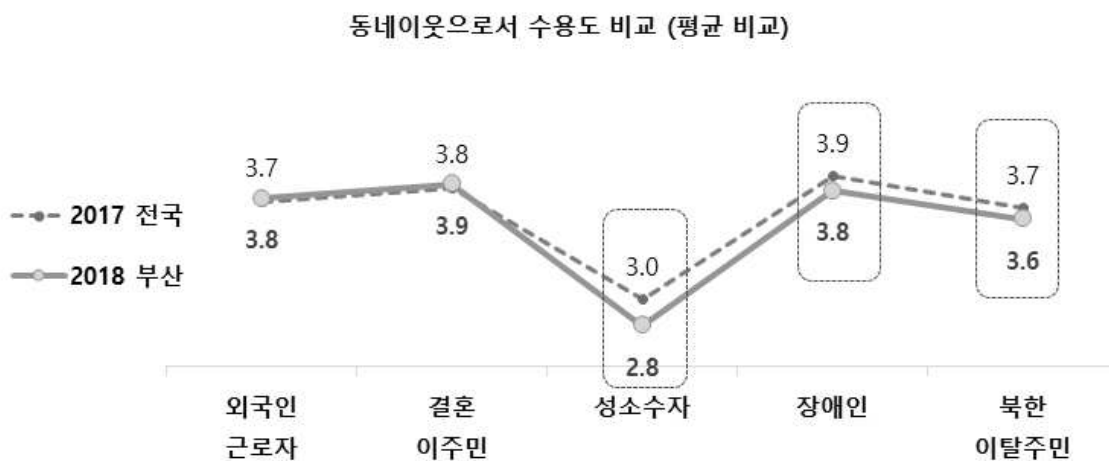
□ 소수집단 중 가장 수용도가 낮은 집단은 ‘난민’과 ‘성소수자’이며,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 등 특성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 성 소수자에 비해 난민은 비교적 최근에 사회문제로 언급되었던 집단임.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는 대두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뿌리 깊은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음. 이를 통해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부산시민의 소수집단 수용도



전국대비 부산시민의 소수집단 수용도

□ 사회갈등 현상 중 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나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은 상대적으로 크며,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낮고, 타 지역에 대한 반감은 적지만 지방차별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음.

-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는 전체 응답자의 10%만 동의하였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31%, ‘젊은 사람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 25%로 노인에 대한 혐오보다 청년층에 대한 편견이 2~3배는 크게 나타남.

- 관계자 인터뷰 결과, 부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기득권을 가진 세대가 청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곧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짐.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 활동 범위가 더욱 제한적임.

-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나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동료/구성원의 성별은 상관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국에서는 82%, 79%였으나, 부산은 73%, 75%에 그침.

- 타 지역민에 대한 반감은 6~8% 내외로 낮지만,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에 대한 동의는 68%,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63%로 매우 높음. 또한, 응답자의 82%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부산시민의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동의도)

문항		5점 평균 (점)	동의도 (%)
성별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최고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 한다	3.0	32
	인터넷 등에서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	2.6	17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2.8	28
세대 (노년)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2.3	10
	인터넷 등에서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	2.5	16
	우리지역에 노인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할 것이다	2.2	7
세대 (청년)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	3.0	31
	젊은 사람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	2.7	25
인종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2.2	8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2.2	8
경제	나보다 경제적 수준인 낮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것은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2.2	8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는 이왕이면 우리 가정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친구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2.7	23
지역	내가 속한 모임, 동호회에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온다면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2.2	8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부산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	2.0	8
지방차별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	3.8	68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3.7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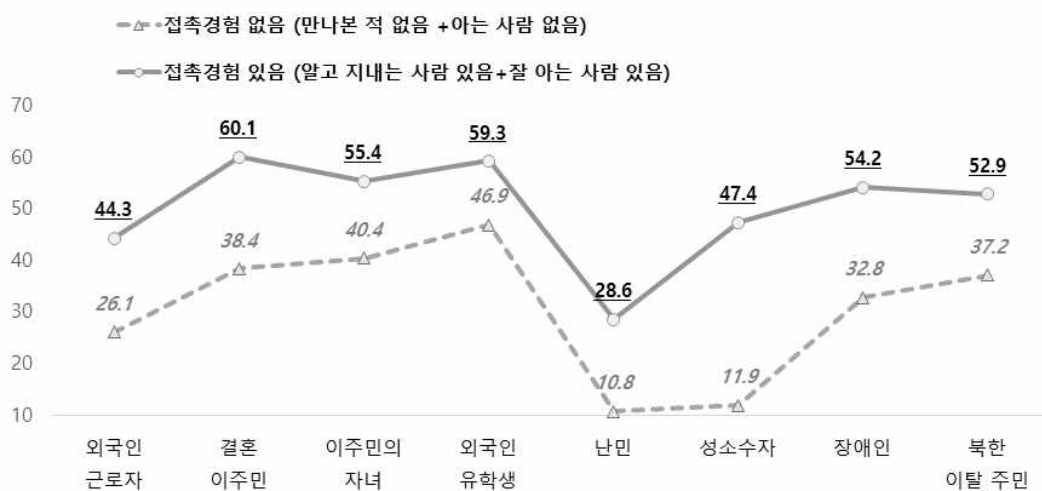
□ 20대 여성이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가장 민감하며,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20대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난민, 이주민의 자녀 등 대부분의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낮은 연령인 여성일수록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많이 겪고 있어서 소수집단이 받는 차별에 민감한 편이라고 해석함.
- 소수집단과 접촉 경험이 있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가족으로서의 소수집단 수용도_성×연령별 분석

단위 : %(매우 그렇다+그렇다)

연령×성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외국인 유학생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10대 남성	34.2	51.2	58.5	61.0	22.0	19.5	39.0	39.0
10대 여성	34.2	47.3	50.0	65.8	21.0	34.3	44.7	44.7
20대 남성	22.3	43.5	36.5	51.7	7.0	11.7	30.6	34.1
20대 여성	36.8	55.1	56.3	59.8	8.0	47.1	50.5	44.8
30대 남성	24.5	37.3	39.2	39.3	10.8	12.7	39.2	34.3
30대 여성	23.2	44.4	47.4	57.6	3.0	24.2	45.5	25.3
40대 남성	23.5	39.2	40.2	35.3	14.7	14.7	48.0	37.3
40대 여성	23.1	36.7	41.0	47.8	10.3	21.4	46.2	33.3
50대 남성	34.7	43.0	43.0	46.3	17.4	7.4	51.2	47.1
50대 여성	29.3	39.1	38.4	45.2	13.6	7.5	39.1	33.1
60대 남성	31.0	41.7	39.3	48.8	9.5	2.4	50.0	53.5
60대 여성	34.1	41.8	41.8	47.3	8.8	3.3	38.5	35.2
70대 남성	27.3	36.4	40.9	54.6	6.8	6.8	31.8	45.4
70대 여성	26.8	37.5	33.9	50.0	7.1	-	30.4	37.5



가족으로서 소수집단 수용도_소수집단 접촉 경험

- 연령대·성별 집단 중 30대 남성이 다른 집단과는 달리 성평등,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임.
-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과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여성보다 30대 남성이 최대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0대 남성은 다른 연령대·성별 집단보다 여성은 일이 아닌 보육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비율이 높음.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부산에서 진행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워크숍이나 강연에 대부분 여성만이 참석하며, 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함. 여성은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남성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성별 간 인식에 대한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부산에서는 노인혐오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유일하게 여성보다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가 30대 남성임.

부산시민의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인식 (동의도)

문항		5점 평균 (점)		동의도 (%)	
		전체	30대 남성	전체	30대 남성
성별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기업최고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 한다	3.0	3.3	32	45
	인터넷 등에서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	2.6	2.8	17	25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2.8	2.8	28	23
세대 (노년)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2.3	2.6	10	14
	인터넷 등에서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	2.5	2.8	16	25
	우리지역에 노인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면 반대할 것이다	2.2	2.5	7	13
세대 (청년)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	3.0	3.0	31	28
	젊은 사람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	2.7	2.5	25	19
인종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2.2	2.4	8	10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2.2	2.5	8	15
경제	나보다 경제적 수준인 낮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것은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2.2	2.3	8	11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는 이왕이면 우리 가정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의 친구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2.7	2.9	23	30
지역	내가 속한 모임, 동호회에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온다면 솔직히 내키지 않는다	2.2	2.4	8	12
	중요한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부산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잘 나온다	2.0	2.2	8	10
지방 차별	중요한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해당될 때가 많다	3.8	3.6	68	59
	알게 모르게 지방업체들은 차별받고 있다	3.7	3.5	63	53

3. 부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

□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산시민은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비율 등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국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이나 수용도는 전국에 비해서 낮음.
- 조사결과와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부산시민들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여 소수집단이 차별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산시민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다양성과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10대 대상 이주민/다문화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소수집단과 여성 혐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함.

- 현재 부산지역 학교에서 이주민/다문화 교육이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안내문을 학부모의 모국어로 작성해 보내는 ‘다봄 번역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10대의 결혼이주민이나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수용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음.
- 하지만 10대의 결혼이주민과 이주민의 자녀 외에 난민,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따라서 다문화 이외에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또한, ‘인터넷 등에서 나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면 솔직히 이해가 간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남성 중 10대 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은 현재 성평등 교육이 성차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재한 채 성 평등 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평등을 위한 대책을 오히려 혜택으로 인식한다는 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음. 따라서 성차별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성평등 대책을 함께 공유 및 논의할 기회 마련이 필요함.

□ 성인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반적인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이 필요함.

- 10대는 학교 내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인은 학창시절 다문화를 비롯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사회에서도 인식 개선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임.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나타남. 대표적으로 20대 여성은 소수집단 차별에 민감하며, 20~30대 여성은 소수집단이나 사회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30대 남성은 성별과 노인에 부정적이고 소수집단이나 사회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 연령 간 인식의 격차가 점차 커져 또 하나의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을 위해 소수집단에 대한 이해와 접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소수집단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소수집단 별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고, 소수집단을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비율 역시 높음. 특히, 소수집단을 가족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비율은 접촉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최대 36% 차이가 남.

- 소수집단과의 접촉 경험이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이나 축제, 봉사활동 등을 시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수집단과 시민들이 일상 범위 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소수집단이 구분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시민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도시재생, 문화도시 등 부산시의 발전 방향에 소수집단을 함께 고려하는 설계가 요구됨.

□ 이주 배경에 따라 차별의 정도가 달라지며, 거주한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므로 외국인의 다양한 특징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필요함.

- 부산시민은 외국인 중 유학생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고 난민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용도도 낮은 편임. 이주 배경에 따라 부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다름.

- 하지만 수용도가 가장 높은 유학생도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도 일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곧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온 근로자만을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이주민 대상 지원은 입국 초기에만 집중되어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관계자 인터뷰에서 지적됨. 더 나아가 이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활동하는 기회와 공간이 없어 고립되기도 함.

- 부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개선을 위한 소수집단과 일반 시민 간 접촉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더 나아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 장애인을 향한 차별 없는 차별, 진정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구축이 필요함.

- 전체 응답자의 38%만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용도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임.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차별이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원받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함.
-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차별받았을 때 장애인이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또한,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이 노인 등 교통약자로도 확대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이동성은 위축되었으며, 영화관 내 장애인석의 경우 맨 앞이나 맨 뒷자리에 위치하거나 계단으로 되어있어 사실상 접근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은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시설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와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 등 다차원적인 배리어프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 난민보다 오래된 이슈이지만 난민과 비슷한 수준의 수용도를 보이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가 난민보다 더 오래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는 그동안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고려되지 않은 집단임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제시함.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 난민은 2018년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함.)
- 성소수자 이슈는 뚜렷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반대 집단으로 인하여 인권 조례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차별에 노출된 시간 역시 길었으며,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하여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음(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 무의식 속에 퍼져있는 부산의 가부장성을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엄마가 직장에 다닌다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여성과 남성 모두 고령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곧 보육과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고령으로 갈수록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함.
- 가부장성은 세대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침. 젊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며,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역시 고령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짐.

-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부산의 가부장성은 여성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제기함. 가부장성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청년의 사회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세대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임.

- 가부장성은 생활 속에 녹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가부장성은 세대 간 갈등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갈등인 ‘수도권과 지방차별’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만의 기준을 수립하여 제반 환경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생활 인프라임.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문화예술 활동 건수 역시 차이가 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에 따르면, 2017년 부산시의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서울의 60% 수준에 그침.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지역(인구수) 단위:천명	시각예술	공연예술						계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전국	28.2	3.1	20.4	12.6	2.6	5.0	43.7	71.9
서울(9,857)	62.9	6.3	36.2	16.9	5.1	6.6	71.2	134.1
부산(3,471)	26.3	2.0	27.7	14.8	3.7	4.6	52.8	79.1

-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수도권과 지방차별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의 수를 늘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와 동시에 수도권과의 수치 비교가 아닌 부산만의 기준을 설정해야 함.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공공시설 수, 노후 연수 등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²⁾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제반 환경 구축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함.

2) 한국경제(2018.12.21.). "서울·지방, 생활 인프라 최대 50배 격차... '삶의 질'에 악영향".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2125601>

발제 2

현 문화다양성 정책 흐름과 지역의 문화다양성 역할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2. 현 문화다양성 정책 흐름과 지역의 문화다양성 역할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개념

문화다양성 개념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물론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92년 소수자권리에 관한 선언, 2001년 세계문화 다양성선언 등이 있었고, 2003년에 유엔에서 최초로 문화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의제가 발의되어서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르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이주민들과 관련된 인종이나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성별, 종교, 언어 등의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국 문화다양성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문화, 문화와 문화의 더 나은 관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문화다양성’은 ‘다양성은 모든 문화가 지닌 본질적이고 보편적 특성이며,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휴머니즘 차원의 개념을 나타낸다. 즉 다양성이 문화 창조의 자양분이고 새로운 문화의 출현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공존’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함의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 그 자체가 자원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사회통합의 전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별 소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그들의 생활권을 지원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소수자 및 다수자가 상호 간 다양한 문화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II. 문화다양성정책의 방향: 갈등의 해소와 차이의 이해

오늘날 국내외에는 정치·경제적인 요인,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다양한 갈등사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문제, 문화적 갈등, 세계적인 테러문제 등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를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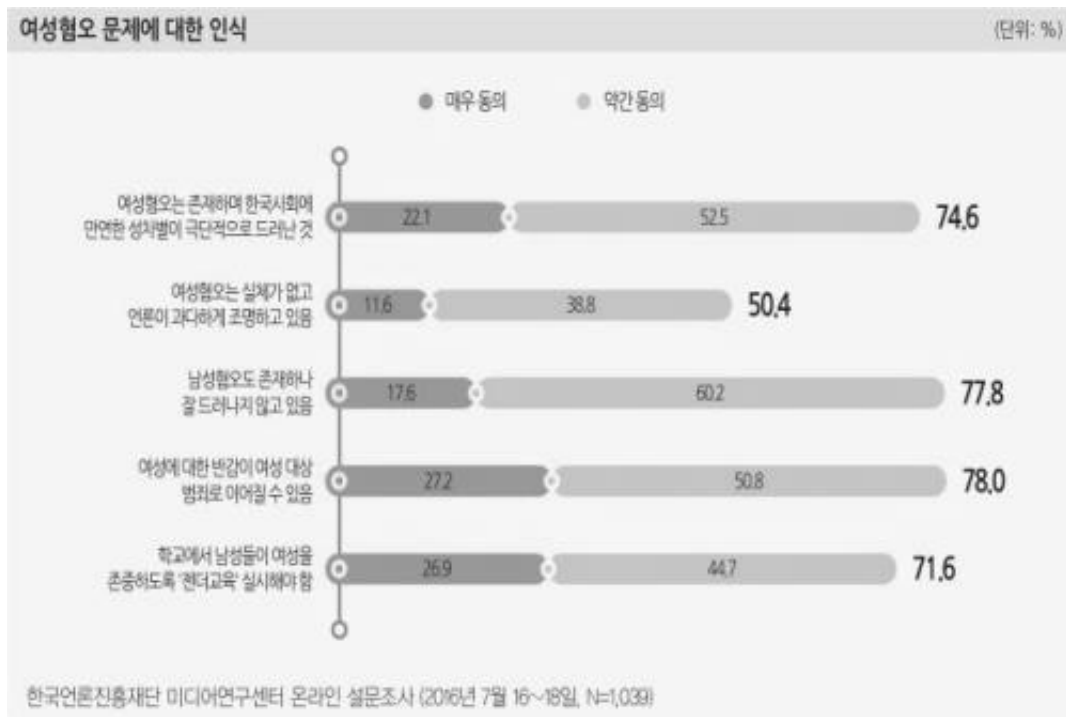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 자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부당한 대우가 만연해 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한국인과 다른 외모 때문에 또래 집단에서 소외와 차별을 겪는 이주 아동도 적지 않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14년 발표한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0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가치를 어지럽힌다고 본 20대는 13.3%였지만, 2013년에 31.3%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³⁾

차별의 대상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다. 성차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여성혐오다. 여성혐오 또는 여성증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 방식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20~50대 성인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6%가 여성혐오는 우리사회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4.1%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혐오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3) 아산정책연구원(2014), 「달한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7. 27.), “국민 74.6% ‘우리사회 여성혐오 실제 존재’”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위치도 위협받고 있다.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KQCF)는 2000년 이래로 서울에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로 한국에서 가장 큰 축제이며,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축제로 손꼽힌다. 퀴어문화축제는 ‘친구 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 인사가 참가하여 2000년 9월 8일부터 연세대학교에서 이틀간 개최되면서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무지개영화제(현재 한국퀴어영화제)가 퀴어문화축제에 포함되었고, 홍익대학교,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축제가 열렸으며, 축제 관중은 2000년 20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기준 2만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퀴어문화축제에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관련 사업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등 진보적 기독교 단체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대사관도 성소수자 인권 안내 부스를 설치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사회적 차별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등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은 여전히 미흡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례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문화다양성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인식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효과는 미미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연 번	지방 자치 단체	분류별 사업 수								문화 다양성 사업 예산 (백만원)	부처 예산규모* (백만원)	전체예산 대비 문화 다양성 사업예산 (%)
		①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② 문화 기본권 신장	③ 공감 대 형성 및 갈등 해소	④ 정책 추진 체계 구축	⑤ 실태 파악 및 정책 개발	⑥ 국제 문화 교류	⑦ 기타	계			
1	서울특별시	72	142	42	7	15	16	0	294	207,288.6	29,801,100	0.70
2	부산광역시	50	239	82	26	6	35	9	447	61,326.7	10,091,139	0.61
3	대구광역시	25	31	15	1	0	33	25	130	20,323.5	7,085,800	0.29
4	인천광역시	59	91	23	4	1	9	1	188	40,905.2	8,316,641	0.49
5	광주광역시	9	46	4	5	1	6	0	71	1,240.0	4,039,754	0.03
6	대전광역시	24	19	9	2	1	1	0	56	2,556.6	3,710,181	0.07
7	울산광역시	1	132	8	5	0	3	1	150	1,375.8	3,247,105	0.04
8	세종특별자치시	1	11	1	0	0	3	0	16	1,326.0	1,412,783	0.09
9	경기도	39	81	25	7	1	35	7	195	9,660.7	19,305,804	0.05
10	강원도	2	20	5	1	0	6	0	34	1,265.2	4,712,407	0.03
11	충청북도	28	77	33	4	0	14	0	156	18,287.1	3,868,481	0.47
12	충청남도	21	47	16	2	2	11	0	99	4,540.4	6,241,600	0.07
13	전라북도	16	27	7	2	0	8	0	60	7,761.9	5,158,524	0.15
14	전라남도	25	89	29	1	0	17	4	165	9,408.9	6,373,508	0.15
15	경상북도	14	29	13	0	0	15	0	71	16,763.8	7,437,866	0.23
16	경상남도	32	54	32	5	3	12	15	153	8,233.5	6,957,853	0.12
17	제주특별 자치도	0	4	3	1	0	3	0	11	1,215.0	4,449,307	0.03
계		418	1,139	347	73	30	227	62	2,296	413,478.8	132,209,853	0.31

※ 표에 제시된 사업 수 및 예산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실제 추진된 사업 수는 다를 수 있음

* 예산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를 참고함

III.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추진 현황

1.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4),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2016~),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방향 통보(17개 시도/ 2018.4), 지자체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13개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이 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수행되었다.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2015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2017), 문화다양성 정책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2018년) 등이다.

2.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간 소통을 촉진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및 인식제고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총 24억 정도이다.

이 예산으로, 소수집단축제, 디아스포라영화제 등 문화소통프로그램 지원으로 20억원을 활용하는데, 이것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통칭한다. 2018년에는 27개 지역문화재단 등이 참여하여, 2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31만 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외에도 UN 지정 문화다양성의 날(5.21)을 기념하는 주간행사를 개최하고(1.2억),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하는데, 1.2억원을 활용한다. 2018년에는 여기에 전문인력 연수 440명, 교원연수 503명이 참여하였다.

문화다양성 연구학교에 4000만원,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에 3000만원을 활용하였는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전국 4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019년에는 경기, 부산, 광주, 충북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6000만원을 활용하였다.

3. 국제협력 확대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정부 간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즉 2017년 6월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2018년

12월에는 정부간위원회 총회에서는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국가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과 2018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제보고서를 번역, 발간 배포하고 있다.

IV.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개선 방안

1.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다양성 총괄시스템 개편 필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예산집행과 정산 등의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뿐 전반적 정책의 방향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상시 관리하지도 않아서 정책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철학적 기반, 내용과 범위의 분명한 규정과 합의 필요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의 개념이 일반인들 특히 지역으로 충분히 전달되어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법으로 오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의 정책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의식 수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권의 개념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예술다양성, 플랫폼다양성, 언어다양성, 정체성 다양성 등의 표현매개물에서의 다양성 개념이 상호 상충 또는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시급한 설립 필요

현재 문화다양성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실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협의한 결과, 문체부 장관 산하 위원회로 격하시켜서 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위원회도 만들 수 없고, 위원회가 없으며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 승인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4.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화 과정의 정기적 수행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 또는 실태조사의 조사 방법이나 조사 항목이 매번 달라지고 있어서 조사간에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 조차 설정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의 증액 필요

현재 문화부에서 실질적인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비롯한 직접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고작 24억원에 불과하다. 해당 법률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지속적 정책협의체 구성 필요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대단히 상이하고 개별 국가의 국민들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또한 천차만별이라 모든 국가에게 공히 동일하게 적용할만한 구체적인 지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개괄적인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뿐이다. 즉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에도 미달되는 항목이 너무 많아서 문화다양성 수준은 대단히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지역의 수준은 또한 다양한 정치, 종교,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바라보면 관점이 또 다른 차원에서 대단히 상이하며, 특정한 대상별로 또는 개인적 경험에 따라서 동일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의 방식과 평가기준도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앙과 지방의 지속적인 소통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총 2300여 개나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에 충실하게 진행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차별, 혐오, 불평등, 배제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정책의 추진 및 전달 시스템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V. 참고: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내용⁴⁾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2017년 기준)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국제 문화교류	기타	합계
50	239	82	26	6	35	9	447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어울마당’,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아카데미 운영’, ‘간다간다 다문화스쿨’ 등을 진행하여 문화다양성에 관한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부산 동래 지역의 전통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통무용, 기악, 성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됨
-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어울마당’은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이주민의 지역사회 내 이질감 극복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계유산교육과 피란수도였던 부산에 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됨
- ‘간다간다 다문화스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다문화 이주민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에 기여하고자 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대표적으로 ‘곰두리 스포츠센터 운영’,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청년문화 집중 지원’,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등이 추진되어 지역의 문화기본권을 신장함

- ‘곰두리 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종합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도모하며,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을 지원함
- ‘맞춤형 실버문화복지’ 제공으로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가정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예술가가 1:1로 방문해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등 정서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3,000여명이 수혜를 받음
- ‘청년문화 집중 지원’으로 청년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청년문화의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문화도시를 조성을 도모함

4)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참조

-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생활예절과 교양을 교육하고, 선조들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함으로써 인성과 도덕성 함양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피란수도 야행’은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적 가치 및 의미를 재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부산 서구·중구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25개소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2017 남구 대학로 놀이터’, ‘동래읍성역사축제’, ‘구덕골 문화예술제’,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문화다양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함

- ‘2017 남구 대학로 놀이터’는 부산 대학로에서 청년예술문화 및 남구 대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대학가요제 등 7종 26개 프로그램에 부산지역 동아리팀 60여개 팀이 참가함
- ‘동래읍성역사축제’를 개최하여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과 동래 읍성민의 치열한 전투를 그린 동래성전투 실경 뮤지컬, 동래 세가닥 줄다리기 재현, 동래장터 체험 등을 통한 역사문화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홍보를 도모함
- ‘구덕골 문화예술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명랑운동회, 문예창작경연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이 운영됨
-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함

■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도서관’, ‘문화다양성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지역에 독서문화를 보급하고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좌 및 체험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다양성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수립 및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 12명, 실행위원 12명으로 구성하여 부산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5개 거점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함
-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 조치를 통해 부산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함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부산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다문화가정 현황조사’,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오륙도 평화축제 만족도 조사’, ‘정신장애인 연구’를 시행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실태를 파악함

- ‘다문화가정 현황조사’는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 및 생활지원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시책수립에 기초가 될 통계자료를 구축함
-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책 만족도, 참여희망 프로그램, 우선 추진 정책 등을 알아보고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오륙도 평화축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객, 외국인, 일반주민 등에게 축제의 4개분야 25개 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UN 평화문화특구인 부산 남구의 정체성 계승을 도모함
- ‘정신장애인 연구’를 시행하여 부산에 거주 중인 정신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국제 문화교류) ‘국제청년문화 박람회’, ‘부산국제영화제’, ‘아트부산 2017’,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의 장을 마련함

- ‘국제청년문화 박람회’는 국내외 청년문화 아티스트들과의 문화교류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부산 대학로를 청년 문화의 메카로 정착시키고 해외 청년 예술가와의 합동공연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함
-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76개국 300편을 상영하고, 게스트 10,895명, 관객 수 192,991명을 동원하며 아시아영화 세계시장 진출 발판 마련 및 영상산업 허브로의 실현을 도모함
- ‘아트부산 2017’ 개최를 통해 미술문화 활성화 및 시민의 미술 향유권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미술작가,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6개국 169개 갤러리 4,000여점이 출품함
-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평화공존·선진우호 정신계승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며, 조선통신사 축제, 한일네트워크사업, 학술사업, 홍보 등을 시행함

지정토론 1

김부민 |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개념 정리

김부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

1. 부산은 지형적으로 문화다양성이 긍정적인 지역이다

- 산, 강, 바다, 호수(?) 등이 존재하는 대도시이다.

2. 부산은 경상도의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다.

- 성별 동의도에서 높게 나온 결과를 참조(p.78)
- 밥 먹자. 자자

3. 부산은 제2의 도시다.

- 부산이 70~80년대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자부심이 아직 남아 있다.
- 상대적인 도시는 서울밖에 없다. (수도권과 비교)

4.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외국인 노동자는 동남아 외국인이다.
→ 외국인 노동자는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다
- 중국유학생들은 못사는 나라 학생이다.
→ 중국학생들은 미래의 글로벌 동반자다.
- 남성은 여정보다 낫다
→ 여성은 섬세함과 부지런함이 있다.
-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다
→ 나와 성향이 다르다.
- 장애인 때문에 불편하다.
→ 내 친구다

5.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알려야 한다.

- 수용도 ↑(유학생, 장애인)
- 수용도 ↓(난민, 성소수자)

지정토론 2

변정희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성평등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산을 꿈꾸며

변정희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서지현 검사가 쏘아올린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부산에서도 문화예술계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있었다.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와 미투운동부산대책위 등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가 개최되었고, 발화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부산에서의 사건 해결의 지난함과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 대리인을 비롯한 조력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많은 이들이 침묵과,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의 분위기였다. 피해자가 오히려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하거나, 농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나쁜 의도는 없었거나, 그 정도 가지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거나, 너무 사소한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거나 등등 무수한 버전을 가진 이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화가 풍기는 ‘분위기’는, 어쩌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것을 무엇이 라고 말하면 좋을까? 부산의 공기같은 가부장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부산사나이’나 ‘경상도 남자’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할 때, 우리는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은연중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부산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같은 부산의 ‘가부장적 문화’를 손에 잡히는 지표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산시민이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는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편, 성차별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을 그 어떤 지표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최근 <시사IN>⁵⁾을 통해 분석되었던 것처럼 성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20대에서부터 본격화되었다면, 부산지역의 경우 30대 남성 집단 역시 성평등이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다 넓은 집단에서 성평등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무의식 속에 퍼져 있는 부산의 가부장성’을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 성평등 이슈가 단지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는 문제라는 점에 대한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우리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만남과 숙고와 토론과 소통이

5) <시사IN> 제 604호, 2019년 4월 15일, 커버스토리, <20대 남성, 그들은 누구인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산의 문화적 지표들에 대한 논의들을 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이제는, 성평등한 문화가 살아숨쉬는 부산에서 살고 싶다

이미 OECD 가입 가입국가 중 한국 사회는 15년이 넘게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는 2018년 기준 144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였다. 성별에 따른 고용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거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성희롱,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산은 성별 고용격차 면에서도 전국 평균의 4.1%를 밑돌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⁶⁾ 또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출생,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은 낮고 전년 대비 경력단절 여성 증가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⁷⁾ 고용불안정과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적 언사, 성희롱과, 성폭력까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여성 한 명의 불운이나 개인적 경험이나 능력 혹은 ‘노오력’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숙고해야 하는 것일까?

한편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함께 하는 중소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였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6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중소, 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하며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 그뿐인가. 2017년 부산의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기도 전에 반대 운동이 일어났으며, 2019년 ‘젠더전문관’ 신설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의회에서 전원 부결된 것 역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젠더’라는 말이 성소수자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동성애를 반대하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시도를 결사 저지하는 집단의 존재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에 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로 치부하는 등 우발적이거나 사적인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들을 마주치게 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페미니즘 운동에 있어 중요한 명제인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사적인 문제로 삭제하려는 사회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6)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 토론회 <여성, 가족의 2040 미래도시 비전을 디자인하다> 중 ‘동북아 해양수도 여성가족 분야 비전과 전략수립(안)’(전혜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7) 부산여성가족 BRIEF 038호, 2018년 12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문화다양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지 성별, 인종, 연령, 세대, 장애 등의 갈등에 대한 인식개선만을 위한 목표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드러낸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는 없다. 우리가 당면한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그 해결과정의 첫 번째 매듭이 지어졌다면, 구조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해결과정의 모색에 대한 이 다음의 매듭을 짓기 위해 길을 나서야 할 때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시민으로 겨우 살아가며, 여전히 부산을 사랑한다. 다만 이제는 “성평등한 문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부산에서 살아가고 싶다.

지정토론 3

윤지영 |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따른 과제 방향

윤지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다양성(diversity)의 어원인 ‘diversus’ 라틴어를 살펴보면, 각종의, 서로 다른, 가지각색 등 서로 다른의 차이를 드러내며 다양한 것들이 조화와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과정 속에서 창조적 문화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문(2005)에 따르면,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정체성 등,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들 및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을 통해 구현된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의 생각, 정체성, 영감을 실어 나르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문화다양성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을 위한 조건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에 동력이 되는 개념이다. 나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문화생활의 참여권과 향유권을 박탈당한다거나, 차별을 받게 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며 스스로 세계로부터 폐쇄적인 사회를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2013년에 제정된 문화권은 국민기본권으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문화 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와 향유할 권리가 있다. 문화다양성은 일관되지 않은 표현의 방식, 방식의 다름에 대한 존중, 수용 및 인식, 사고의 자유, 소통의 자유 등에서 비롯된다.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7년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시점에 부산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매우 시기적절한 조사이다.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현재 부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처음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기에 집단별 조사 대상을 모집하는 일 또한 다른 조사에 비해 표본 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제도가 기반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바람직한 개념으로 현장조사와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성상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생활환경, 문화접근성 정도, 문화향유 정도 등 문화다양성의 실제적인 운용환경을 조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산시 현황을 체계적이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바람직한 문화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부산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화다양성의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이 처음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이기에 조사의 한계와 제한된 내용이 있는 부분에 관한 보완과 개선사항들을 향후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수행 시 이 부분들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 방향으로

첫째,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지표와 활동지표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의 바람직한 정책 정착을 위해 보편적이지만, 부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지표개발을 통해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내용이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분류체계가 확정된 집단별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활동지표에 의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번 조사에서 제외시킨 문화소외와 생활문화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중요한 지표이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항목이다. 문화는 다양성을 수용하고 공유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는 확장된다.

셋째, 소수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문화다양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소수집단 중 분류된 어떤 특정 집단에 집중하여 집중 지원 정책을 추진하거나 환경 조성을 지원하거나 하는 정책들은 자칫 다른 집단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비분리)에 언급되었듯이, 각각의 소수집단 중 일부 집단에 국한되어 추진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소외될 수도 이중 잣대로 인한 비합리적·비효율적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 디자인의 BF시설 적용과 같이 가능한한 소수 집단들 모두가 배려된 통합 지원 정책을 우선 시행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만을 위한 BF가 아닌 소수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BF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된 향후 과제를 수행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바로 인식의 변화이다. 인식의 변화는 교육과 학습에 의해 인식이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근 다방면으로 환경 개선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식이 변화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의 이해도가 낮게 나온 만큼, 이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교육과 환경조성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관용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 어떤 특정 집단을 도와주는 것이 조금 다름에 대한 배려로 포장한 우위선상에서의 포용의 자세가 아닌 서로 다름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4

이광혁 |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대표

부산 문화다양성 당면과제 제시 및 후속 조치 제언

이광혁 노동예술지원센터 흥 대표

1. 현황에 대한 평가

(1) 정량적 평가

-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예산배정
 -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관련 논의 시작
 - 부산퀴어문화축제의 안정적 개최/진행
 - 문화다양성 축제 진행
 - 부산지역 여성운동 단체의 증가 및 네트워킹 확산
- => 전반적으로 긍정적. 양적으로 더 늘어나길 기대.

(2) 정성적 평가

- 부산퀴어문화축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나 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원 미비
 - 문화다양성 축제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 삭감. 문화다양성의 본질적 가치가 확산되기 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는 느낌
 - 많은 행사 및 축제에서 지역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지역성 찾아보기 힘든 구조
- => 철학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운동의 주체를 양산해내는 구조가 없음.

2. 당면과제 및 후속조치 제언

(1)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컨트롤 타워 필요
- 개념 정립 및 가치 확산에 대한 주기적인 목표 수립하고 그에 맞는 주기적 평가 및 대책 마련
- 예산 마련 및 예산 증액을 위한 기틀 마련

(2) 지원사업의 다각화&유연화

- 부산퀴어문화축제

매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나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 문화다양성 축제

많은 인종과 소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하는 느낌.

분기별로 하나의 분야를 정해서 깊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 어떨까.

ex) 봄—장애/여름—여성/가을—다문화/겨울—세대

- 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모든 지원사업에서 문화다양성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여성 / 다문화 / 장애 / 퀴어 예술가나 실무자를 쓰도록 쿼터제를 도입

(3) 지역성 강조의 방향

- 지역 특성화 지원사업 / 브랜드콘텐츠 지원사업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화다양성적 요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 '부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산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선정된 콘텐츠들은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할 수 있게 다양한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 매칭

- 부산의 많은 축제/행사들을 주류문화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지정토론 5

이재정 |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의 출발점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여건현황과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기초 설문을 만드는 과정과 조사를 끝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를 기본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사가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부산지역에 있어서의 문화다양성, 사회갈등, 성별 불평등,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조사가 종합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사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조사가 종합적이고, 연령 또한 15~79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부산지역의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다양성과 소수집단의 수용성에 대한 관심

- 조사결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라고 인식에서 부산시민은 34%, 전국은 26%라고 응답하였고, 또한 평균점수가 3.1점 vs 2.9점으로 본 문항의 조사결과만 보면 부산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이 다른 지역보다 잘 실현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문항을 볼 때, 소수자들이 권리와 이익을 보장되고 있다(부산 2.5점 vs 전국 2.4점),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부산 2.6점 vs 전국 2.3점)는 점에서 부산지역의 응답자가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의 주요 인식지표 중 하나인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가족 및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전국 대비 성 소수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에 대한 수용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는 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미와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대상자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지만 내 가족이나 이웃이 혹은 내 주위에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외국인 근로자 혹은 성 소수자일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결과를 볼 때 향후 부산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차별인식을 줄이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령에 대한 상호 수용성

- 우리 부산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연구를 할 때마다 연령간의 갈등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립치매시설 설치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점, 국민연금으로 촉발된 연령간의 갈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간의 문제와 정년연장 등 우리사회 내 연령간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부산의 경우 좀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TV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비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노인은 돌봄과 부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 스스로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본 조사 결과, 노인에 대한 편견보다는 젊은 층에 대한 편견이 우리 부산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계층과 노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등이 해소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본 조사에 ‘연령’이라는 이슈는 향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넘어 부산시의 다양한 시책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지역에서의 소통의 공간과 통로

- 부산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언에서 발표자의 제언대로 부산시민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다양성과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발표의 제언에서 제시된 것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혹은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접촉의 기회를 높이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자원봉사 보다는 문화를 통해 서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존중과 배려’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지역 내 문화공연의 물리적 접근성, 가족과의 참여가능 여부, 나이 제한으로 인한 차별 방지 등을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노인의 활동적인노화와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이 들어가면서 살기 좋은 도시에 있어 지역 내에서의 활동과 문화, 공연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 복지계의 이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와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서로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시책이 이번 기회를 통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부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부산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은?

부산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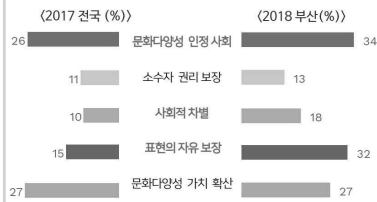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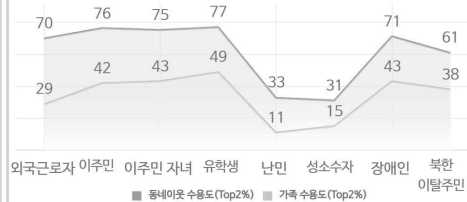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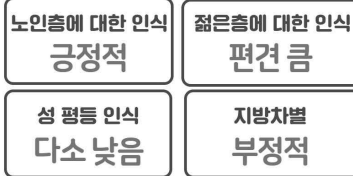
전국 대비 부산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부산지역 소수집단 수용 의향



부산시민 사회갈등 인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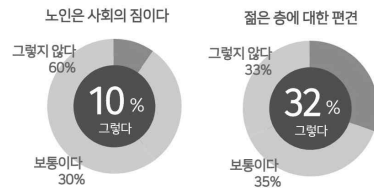


사회갈등 현상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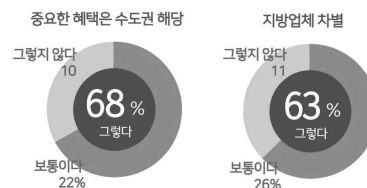
부산시민 - 그렇다 응답 (5점 만점)



사회갈등 - 세대



사회갈등 - 지방차별



사회갈등 - 성 불평등

부산지역 성 불평등 인식 비교



전국대비 부산지역 성 평등 인식 비교(%)

